

광주 자치경찰 초대 위원회 추천 인사 공정성 논란

7월 전면 시행 ... 경찰 조직 지휘·감독 막강 권한에 출범 전부터 잡음
시의회 공모 1위 대신 2위·4위 지명, 교육감은 교육계 인사 배제 논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광주 자치경찰이 지휘·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초대 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출범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시장과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경찰 조직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계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결정권을 갖게 된다. 또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

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특히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위원회는 광주시장 추천 1명,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그리고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1명씩 추천을 통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의회 2명, 시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등 4명이 추천됐으며, 위원추천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여성 변호사와 언론인 등이 추천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자신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

으로 지명되는 만큼 최적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원조회와 자격요건, 당적 등 결격사유 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놓고 각종 잡음이 일면서 출범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광주시의회 추천위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8명의 지원자 중 2배수인 4명을 선발했는데, 이례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A변호사를 배제하고, 2위인 경찰 총경 출신 B씨와 4위인 교수출신 C씨 등 2명을 선택했다.

시의회는 시교육감이 변호사 출신을 추천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시의회 내부에선 공개 모집인 만큼 1위를 차지한 A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김 의장이 4위인 C씨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모 심사에 참여했던 상임위원장들도 의장의 최종 선택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공정성을 지킨다며 공개모집을 해 놓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1위를 배제한 것이 공정한 것이냐"면서 "언제부터 시의회가 시청과 시교육감의 위원 선택까지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며, 타 기관 추천위원들의 직업 등을 고려해 2배수 내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선 추천 인사 중 2명이 대전시의회 의장과 인척 관계 등으로 드러나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감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시교육감에게 지명권을 준 만큼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추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중요 임무 중 한쪽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기출인, 실종아동, 아동·여성·청소년 등 취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등으로 초·중·고교생 범죄와 밀접하지만, 교육계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대변할 자치경찰 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발생하다 보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아슬아슬한 국면...여기서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백신 3분기 2000만회분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방심하다가가는 폭발적 대응행으로 변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

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인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대비책으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3분기까지 2000만회분의 백신이 국민을 위해 공급될 것"이라며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중앙공원1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들어선다

시행사,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광주시, 사업·협약이행보증서 요청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 명품 아파트인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으로 명품 브랜드인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를 시공할 예정이다.

중앙공원 1 지구는 풍양호수를 포함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롯데건설은 후분양 방식에 따라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액 중 6500억 원을 우선 조달하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등에만 짓고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약정했다.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 측은 앞서 6500억 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 협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했

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이달말까지 사업 이행 보증서, 협약 이행 보증서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말까지 사업 이행 보증서, 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을 놓고 양측으로 갈라져 내분을 겪고 있는데, 내부 싸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악의 경우 사업 시행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관련법상 사업자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이 폐지돼 새로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이행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 사업자 지정 취소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사유지로 전환돼 땅 주인 허락 없이는 시민들의 출입마저 통제된다는 의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미안마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연대 ▶6면
- 굿모닝 예방-골목 여행-골목 비엔날레 ▶18-19면
- 타이거즈 전광대 - 실종된 흥분을 찾아라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월 12일(월)부터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년 생산·운영 실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시기

- 선불카드(일부 업종 사용 제한)
* 인터넷 상거래(PG), 유흥업종, 레저용품·업소, 백화점 상품권 등 사용불가

- '21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 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 •

신청기간 방법

(온라인) '21년 4월 12일 ~ 4월 30일
'농가지원바우처.kr' 접속·신청 (PC·모바일 가능)

(현장) '21년 4월 14일 ~ 4월 30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필요서류

신청서(지자체 방문시 제공),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증명서류
- 자격증명: 경력사실확인서 등
- 매출증명: 출하실적증명서 등

심사결과 통보

~ '21년 5월 14일(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안내)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21년 5월 14일 ~ 5월 23일

이의신청 장소

'농가지원바우처.kr' 접속·신청 (PC·모바일 가능)
*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문의처(오전9시~오후 6시)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Tel. 1670-2830),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농가지원바우처.kr